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5.235>

JCCT 2024–9–28

한국의 ESG 정책 발전과 기업 대응 전략: 주요국 사례와의 비교 분석

Development of ESG Policies in Korea and Corporate Response Strategies: A Comparative Analysis with Major Countries

이주용*

Ju-Yong Lee*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발전 과정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요국 사례와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ESG 정책은 K-ESG 가이드라인 발표, ESG 공시 의무화 계획 등을 통해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주요국에 비해 정책의 구체성과 강제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응 측면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ESG 전략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탄소중립 대응, 금융업의 책임투자 확대, IT 산업의 데이터 보안 강화 등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 전략이 수립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ESG 정책의 개선 방향으로 ESG 공시 기준의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 제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산업별 차별화된 정책 수립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의 효과적인 ESG 대응을 위해 ESG의 전략적 통합,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ESG 데이터 관리 역량 제고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ESG 정책, 기업 대응 전략, 지속가능경영, K-ESG 가이드라인, ESG 공시, 중소기업 ESG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policies in Korea and corporate response strategies, comparing them with cases from major countries. The results show that while Korea has established a basic framework for ESG policies through the K-ESG guidelines and plans for mandatory ESG disclosure, these policies lack the specificity and enforceability seen in major countries. In terms of corporate response, large companies are actively formulating ESG strategies, but strengthening ESG capabiliti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remains an urgent task. Industry-specific ESG strategies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ector, such as carbon neutrality in manufacturing, expansion of responsible investment in finance, and enhanced data security in IT. This study suggests improving Korean ESG policies by enhancing the alignment of ESG disclosure standards with international norms, strengthening tailored support for SMEs, and developing industry-specific policies. For effective corporate ESG response, the study proposes strategic integration of ESG, enhanced communication with stakeholders, and improved ESG data management capabilities.

Key words : ESG policy, Corporate response strategy, Sustainable management, K-ESG guidelines, ESG disclosure, SME ESG

*정회원, 중원대학교 드론봇 군사학과 교수 (단독저자)
접수일: 2024년 7월 15일, 수정완료일: 2024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0일

Received: July 15, 2024 / Revised: August 10, 2024

Accepted: September 10, 2024

*Corresponding Author: lly10248@hanmail.net

Dept. of Dronebot Military, Jungwon Univ, Korea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ESG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1]. 기후변화, 사회적 불평등, 기업 윤리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기업의 ESG 역량이 위기 대응력과 장기적 생존에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주요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ESG 관련 정책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을 시행하고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채택하는 등 ESG 정보공시 의무화를 선도하고 있다[2]. 미국에서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 관련 공시 규정을 제안하는 등 ESG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글로벌 ESG 트렌드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ESG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3].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ESG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연구 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ESG 정책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주요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ESG 정책의 특징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ESG 대응 현황을 조사하여 정책과 기업 실무 간의 간극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ESG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 1) 한국의 ESG 정책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왔으며,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 2) 주요국의 ESG 정책과 비교했을 때 한국 정책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 3) 한국 기업들은 ESG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별, 산업별 특성은 어떠한가?

4) 한국의 ESG 정책과 기업 대응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한국의 ESG 정책 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주요국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ESG 정책의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4]. 셋째, 기업의 ESG 대응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정책과 기업 실무 간의 간극을 좁히고 효과적인 ESG 추진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한국의 ESG 정책 발전과정

Figure 1. Development Process of ESG Policies in Korea

II. ESG의 개념과 국내외 동향

1. ESG의 정의와 중요성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5]. 환경 요소는 기후변화 대응, 자원 효율성, 오염 관리 등을 포함하며, 사회 요소는 인권, 노동 관행, 제품 책임 등을 다룬다. 지배구조 요소는 이사회 구조, 기업 윤리, 주주 권리 등을 평가한다.

ESG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재무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에 따라 ESG를 투자 의사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6]. 또한 소비자들은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 역시 ESG 경영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2. 국제 ESG 표준 및 이니셔티브

ESG 관련 국제 표준과 이니셔티브는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지속가능회계 기준위원회(SASB) 등이 있다[7]. 이러한 표준들은 기업의 ESG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데 있어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설립되어 글로벌 ESG 공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ISSB는 기존의 다양한 ESG 보고 프레임워크를 통합하여 일관된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8]. 이는 ESG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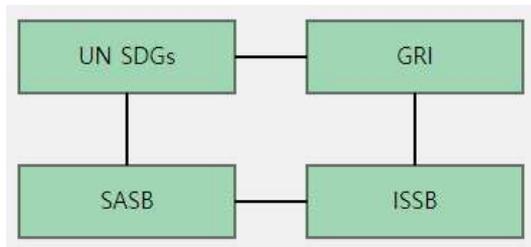


그림 2. 주요 국제 ESG 표준 및 이니셔티브
 Figure 2. Major International ESG Standards and Initiatives

글로벌 ESG 동향을 살펴보면, ESG 관련 규제와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을 통해 금융기관의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후 관련 공시 규정을 제안하는 등 ESG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9][10].

기업들의 ESG 대응도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ESG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경영의 핵심 요소로 통합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 공급망 ESG 관리 강화,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 등이 주요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11].

투자 측면에서도 ESG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ESG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들은 ESG 성과를 투자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에게 ESG 성과 개선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12].

결론적으로, ESG는 기업 경영과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표준의 정립, 규제

강화, 기업의 적극적 대응, 투자자의 관심 증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ESG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앞으로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요소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한국의 ESG 정책 발전 과정

1) K-ESG 가이드라인

우리 정부는 2021년 12월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3]. 이 가이드라인은 13개 주요 국내외 ESG 관련 기관의 3,000개 이상의 평가 및 공시 지표를 분석하여 61개의 핵심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K-ESG 가이드라인은 정보공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K-ESG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표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위한 27개의 핵심 지표를 별도로 선정하여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자발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ESG 공시 의무화의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ESG 공시 규정 및 의무화 추세

한국의 ESG 공시 규정은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월 금융위원회는 ESG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2023년 10월,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의 준비 시간 요청과 미국 등 주요국의 의무화 시기 지연을 고려하여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ESG 정보공개 가이드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ESG 공시를 유도하고 있으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ESG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도 한국의 산업 구조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탄소중립 정책과 ESG의 연계성

한국 정부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ESG 정책과 탄소중립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23년 4월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산업별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과 ESG의 연계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녹색 기술 혁신: 기후기술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기술혁신 로드맵 구축, 한국형 100대 핵심 탄소중립 기술 선정 등을 통해 ESG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녹색 산업 육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후영향 서비스 산업, 기후변화 적응 산업, 스마트 그린 산업 등 새로운 녹색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ESG 금융 확대: 탄소중립 및 녹색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ESG 관련 금융 상품 개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환경정보 공시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규제 합리화: 그린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입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ESG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그림 3. 한국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Figure 3. Policy Implementation for Creating an ESG Ecosystem in Korea

이러한 정책들은 ESG와 탄소중립을 국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한국의 ESG 정책은 글로벌 표준과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국내 산업 구조와 기업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3. 주요국 ESG 정책 사례 분석

1) 유럽연합(EU)의 ESG 정책

유럽연합은 ESG 정책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U의 ESG 정책은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파리협정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 부문의 역할을 강조한다. EU의 대표적인 ESG 관련 규제로는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EU 분류체계(Taxonomy) 등이 있다.

SFDR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지속가능성 위험과 주요 부정적 영향(PAD)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CSRD는 대기업과 상장기업에 대해 환경, 사회, 인권, 반부패 등에 관한 상세한 지속가능성 보고를 의무화한다. EU 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분류하여 녹색 투자의 기준을 제시한다.

2) 미국의 ESG 관련 규제 동향

미국의 ESG 정책은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으나,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기후 관련 공시 규정 제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상장기업들에게 기후 관련 위험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또한 SEC는 ESG 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펀드 명칭 규칙 개정을 통해 ESG 관련 펀드의 투자 전략과 명칭의 일치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ESG에 대한 정치적 논란도 존재한다. 일부 주에서는 ESG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등 ESG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3) 일본의 ESG 추진 전략

일본은 아시아에서 ESG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코포레이트 거버넌스 코드를 도입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금융청(FSA)은 ESG 투자 촉진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고,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권고안 이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TCFD 지지 기관 수가 세계 최대 규모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후 관련 정보 공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4)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ESG 정책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 ESG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녹색금융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리스크 관리 지침을 발표하는 등 지속가능금융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홍콩은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개정하고 ESG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등 ESG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중국은 최근 ESG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녹색금융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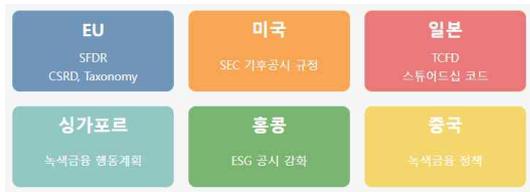


그림 4. 주요국 ESG 정책 비교
 Figure 4. Comparison of ESG Policies in Major Countries

이와 같이 주요국들의 ESG 정책은 각국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EU가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미국은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접근을 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면서도 자국의 경제 상황과 산업 구조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은 글로벌 ESG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각국의 경험과 사례는 향후 ESG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III. 한국과 주요국 ESG 정책 비교

1. 정책 프레임워크 비교

한국의 ESG 정책 프레임워크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발전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2021년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ESG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제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3]. 반면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기업지속가능성보

고지침(CSRD) 등을 통해 ESG 정보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9].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 관련 공시 규정을 제안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ESG 법제화는 아직 진행 중이다[10].

일본은 코포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ESG 요소를 기업 경영과 투자 의사결정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3]. 이는 한국의 접근 방식과 유사하지만, 일본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ESG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기업 공시 요구사항 비교

ESG 정보 공시와 관련하여, 한국은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의 준비 시간 요청을 고려하여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8]. 이는 EU의 CSRD가 2024년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늦은 편이다[2].

미국 SEC의 기후 관련 공시 규정은 2025년부터 대규모 상장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2026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11]. 이는 한국의 계획과 유사한 시간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접근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의 ESG 공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도쿄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권고안에 따른 정보 공시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13]. 이는 자발적 공시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 방식으로, 한국의 단계적 의무화 계획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3. 정부 지원 및 인센티브 비교

ESG 관련 정부 지원 및 인센티브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녹색금융 활성화, ESG 채권 발행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제도는 제한적인 편이다. 반면 EU는 유럽 그린딜을 통해 대규모 재정 지원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14].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청정에너지 투자에 대한 대규모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15]. 이는 ESG 중 특히 환경 부문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한국의 접근 방식보다 더 직접적이고 규모가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녹색혁신기금을 통해 탈탄소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발행을 장려하는 등 금융 측면에서의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13]. 이는 한국의 접근과 유사하지만,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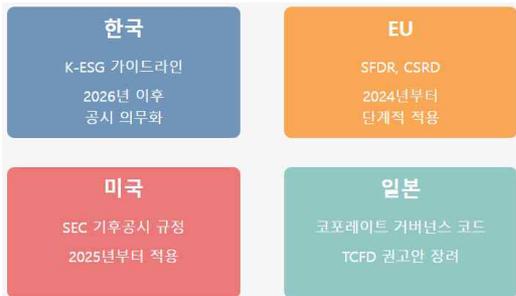


그림 5. 주요국 ESG 정책 비교
 Figure 5. Comparison of ESG Policies in Major Countries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볼 때, 한국의 ESG 정책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방향성은 유사하나, 구체적인 실행과 법제화 측면에서는 아직 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16]. 특히 EU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규제 체계, 미국의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접근, 일본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연계된 ESG 정책 등은 한국이 향후 ESG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17].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동향을 고려하면서도, 한국 기업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균형 잡힌 ESG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IV. 한국 기업의 ESG 대응 전략 분석

1. 대기업의 ESG 대응 사례

한국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ESG 트렌드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환경(E) 부문에서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사회(S) 부문에서 공급망 관리 강화와 인권 경영 도입,

지배구조(G) 부문에서 이사회 다양성 확대와 주주권익 보호 등의 노력이 두드러진다[5].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2050년까지 전 사업장의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그룹은 2050년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그룹 차원의 'Carbon to Green' 전략을 추진하며, ESG 경영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LG화학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성장을 목표로 하며, 배터리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6].

2. 중소기업의 ESG 도입 현황과 과제

중소기업의 ESG 도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이는 ESG 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 재정적 부담,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요인에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의 협력사 ESG 평가 강화와 정부의 지원 정책 확대로 중소기업의 ESG 도입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7].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률은 2021년 24.5%에서 2022년 31.7%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68.3%의 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ESG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 ESG 관련 정보 및 교육 제공, 대-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8].

3. 산업별 ESG 대응 특성

제조업의 경우,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탄소 집약적 산업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혁신과 사업구조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업에서는 책임투자 원칙 도입과 기후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ESG 금융상품 개발도 확대되고 있다[9].

IT/통신 산업에서는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이 주요 ESG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유통/서비스 산업의 경우, 공급망 ESG 관리와 고객 권익 보호, 친환경 포장재 사용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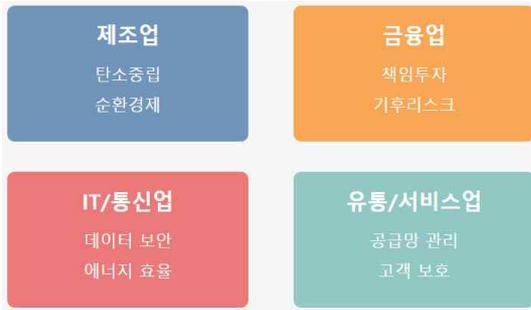


그림 6. 산업별 ESG 대응 특성
 Figure 6. ESG Response Characteristics by Industry

이러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ESG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동시에 산업 간 협력을 통한 ESG 생태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과 금융업의 협력을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 IT 기업과 타 산업 간 협력을 통한 ESG 솔루션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11].

한국 기업들의 ESG 대응은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ESG 전략 수립, ESG 성과의 실질적 개선 등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 기업, 투자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의 ESG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2].

V.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ESG 정책 발전 과정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요국 사례와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ESG 정책은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과 법제화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1]. 특히 K-ESG 가이드라인 발표, ESG 공시 의무화 계획 등을 통해 ESG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EU나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정책의 구체성과 강제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3].

기업의 ESG 대응 측면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4].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탄소중립 대응, 금융업의 책임투자 확대, IT 산업의 데이터 보안 강화 등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 전략이 수립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5][6].

2. 한국 ESG 정책의 개선 방향

한국의 ESG 정책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ESG 공시 기준의 구체화와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다[7]. 금융위원회가 2024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ESG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나, 이 기준이 국제 표준과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국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ISSB 등 국제 표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기업의 이중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8].

둘째, 중소기업에 위한 맞춤형 ESG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9].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교육, 컨설팅, 금융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ESG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10].

셋째,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ESG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11]. 제조업, 금융업, IT 산업 등 각 산업의 ESG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3. 기업의 ESG 대응을 위한 제언

기업의 효과적인 ESG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ESG를 기업 전략의 핵심으로 통합해야 한다[12]. ESG를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닌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로 인식하고, 비즈니스 모델과 의사결정 과정에 ESG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둘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13]. ESG 성과와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자, 고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ESG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셋째, ESG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14]. 신뢰성 있는 ESG 데이터 수집과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ESG 성과 측정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7. 한국 ESG 정책 및 기업 대응 개선 방향

Figure 7. Improvement Directions for Korean ESG Policies and Corporate Responses

결론적으로, 한국의 ESG 정책과 기업 대응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15]. 정부는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ESG를 핵심 전략으로 통합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ESG 데이터 관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16].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은 ESG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17].

References

- [1] Eccles, Robert G., and Svetlana Klimenko. "The Investor Revolution." *Harvard Business Review*, vol. 97, no. 3, 2019, pp. 106-116.
- [2] European Commissio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European Commission, 21 Apr. 2021.
- [3] Joint Ministries. "K-ESG Guidelines v1.0." December 2021.
- [4] Ecochain. "ESG - Reporting,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 Ecochain." Ecochain.
- [5] Abramson, Karen. "Five Trends Shaping the Future of ESG Reporting." *ESG Investor*, 29 June 2023.
- [6] Inogen Alliance. "ESG Global Trends in 2022 - Inogen Alliance." Inogen Alliance.
- [7] Plana. "All 2024 ESG and non-financial reporting regulations in the EU." Plana.
- [8] Korea Times. "Korea to release draft of corporate ESG disclosure standards by April." *The Korea Times*, 14 Feb. 2024.
- [9] European Commission. "Sustainable Finance." European Commission.
- [10]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Proposes Rules to Enhance and

-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SEC.gov, 21 Mar. 2022.
- [11] Davison, Lewis, et al. "ESG: EU Regulatory Change and Its Implication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18 Feb. 2023.
- [12] Kaye, Richard. "ESG IN JAPAN: MISUNDERS TOOD AND UNDERESTIMATED." *Comgest*, June 2021.
- [13] Latham & Watkins LLP. "Regulatory Updates in Asia ESG August 2023." *Latham & Watkins LLP*.
- [14] Crane, William. "Navigate the ESG Regulatory Landscape: A Guide for Multinational Companies." *LinkedIn*, 2023.
- [15] Franklin Templeton. "Beyond ESG: Government incentives delivering green transition." *Franklin Templeton*, 2023.
- [16] AlphaSense. "How the EU's New ESG Reporting Standards Will Impact the US." *Alpha Sense*, 2023.
- [17] The Asia Foundation. "The Rise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n South Korea: Greenwashing or Generational Opportunity?" *The Asia Foundation*, 6 Oct. 2022.